

제424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2025년4월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823)
-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의사진행발언 1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823) 6
 - 경제에 관한 질문 8
 - 대정부질문 의원(이종배) 8
 - 대정부질문 의원(안도결) 14
 - 대정부질문 의원(서범수) 23
 - 대정부질문 의원(주철현) 31
 - 대정부질문 의원(이종욱) 37
 - 대정부질문 의원(김정호) 43
 - 대정부질문 의원(박성훈) 49
 - 대정부질문 의원(김승원) 54
 - 대정부질문 의원(김종민) 60
 - 대정부질문 의원(장철민) 66
 - 대정부질문 의원(이원택) 72

(14시13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최수진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방청인들이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사진행발언

(14시1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의 편파성과 부당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적은 왜 버렸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당적의 박병석 의장, 김진표 의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교과서에도,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의 경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과 국민의회 해산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학회에서도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무제한설, 현상유지설, 궐위·사고 구분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 세 가지 학설 중 최소한 두 가지 학설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들은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적 관례도 없을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강요함으로써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이 궐위된 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의하여 대통령 직무정지나 궐위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행위로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입니다. 도대체 누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철회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깨우치고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의 편파적인 진행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퇴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우원식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제가 꼭 발언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률가 출신들이 법을 해석할 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경우는 룰 오브 로(Rule of Law) 아니에요, 법의 지배? 그런데 나치즘이라든가 군부통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룰 바이 로(Rule by Law) 법에 의한 통치, 자의적 통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치 체제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부분에 있어서 헌정질서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 나치 체제 이후에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반면교사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군부통치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헌정 체제 중에 가장 중요한 헌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본권 확보하고 민주주의 확보하고 헌정질서 회복하는데 있어서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또 대법원, 국회가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요.

여기에 관료분들 계셔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최상목 부총리도 와 계신데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 관료가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가와 관료를 구분해요. 왜 구분했을까요? 정치가는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정치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뭐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관료는 뭐냐?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 질서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가 정치행위와 정치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왜? 관료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뭐냐? 임명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여기 최상목 부총리 누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임명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정 체제인 것입니다. 막스 베버의 얘기를 떠나서 기본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민주공화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화국이라는, 리퍼블릭(republic)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리퍼블릭은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 공적인 것,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리퍼블릭이고 그 리퍼블릭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공화정, 공화주의 얘기할 때 권력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분립의 가장 기본원칙은 누가 선택을 했느냐? 행정부는 가장 권력을 강화하고 자의에 의한 권력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적 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 이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나는 한덕수 총리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법률가 출신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상식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력분립과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는 거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원리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제7공화국 얘기하는데 제7공화국 이전의 6공화국, 87년 체제 헌법은 헌법가치의 수호였어요. 그것은 뭐였냐? 나치즘과 같은, 군부 통치와 같은 체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뭐 했습니까? 나치즘,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 드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마이크 좀 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좀 켜 달라고 하는데요.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선비 정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중에. 선비가 뭐니까? 물러날 자리를 알 때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자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사상을 무시하는 거고.

또 하나, 이완규는 누구냐?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법적 해석으로 기본적인 위법한 행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 윤석열의 친구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라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장 우원식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박성준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제7공화국을 열기 이전에 기본적인 헌법 가치에 대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셨는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은 중립입니다.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22대 국회의 의무이고 또 당연히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대통령권한대행께서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국회의장

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 그리고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가처분 심판을,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상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의 전 기간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도 나오라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안 나오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고, 나오셔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정정당당하게 답변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답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823)

(14시3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추미애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추미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정말 감명이 깊은, 울림이 큰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 힘 의원이 귀틀막을 한 채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말씀을 곁들이면서 제안설명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합법적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관을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합법적 독재의 틀을 만든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개헌’, ‘재선’, ‘3선’ 이러한 단어들을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 독재의 틀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냄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파면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미 파면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 돼서 이런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정치에 가담했다, 정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부적합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의 불법과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든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든지라는 등등의 법 기술을 부려 가면서 감찰의 부적법성을 널리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방패가 돼서 감춰주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수십 년간 법관 경력을 쌓은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법 원칙인 것이지 대통령은 개인, 국민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윤석열의 징계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였던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날 헌법재판관과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도 중앙행정관서장으로 국가기관이지 사인인 개인이 아니다,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될 적법절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로 판단을 해 주었다라면 직무배제당했던 윤석열이 일주일 만에 직무복귀를 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끝내 검찰 쿠데타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런 불행한 일은 일찍이 차단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 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 정국에서 국민을,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형가리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완성될지 알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설명을 배경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민주권의 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도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위 후보자 지명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임명 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등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추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38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종배)

○의장 우원식 그러면 먼저 충북 충주 출신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이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내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코로나 기간 후에 고금리·고물가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내수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뎌서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내수가 아주 장기간 부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내수외환이 겹쳐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봅니다.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심지어 0%를 전망하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초 정부의 전망은 1% 중반대였는데 작년 4/4분기

하고 올해 1/4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 폭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업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정부가 또 민생과 그다음에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관세가 현실이 됐을 경우에 나오는 각 업종별로 업종의 피해들을 지원하고 또 이 기회에 그분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조선 그다음에 철강 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고 또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것처럼 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최대한 저희가 아주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한 12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해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논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94%를 수출이 기여한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총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 달하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봅니다.

부총리,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해서 일단 한숨을 돌리기는 했는데 10%의 기본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이 기본관세조차도 기존의 한미 FTA의 실효관세율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이런 부담이 됐고 또 앞으로 상호관세 등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온다 할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예가 된 것은 상호관세의 경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관세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있고 또 보복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호관세의 부과를 최대한 유예를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재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지금 일단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대결이 아니고, 대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무역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정상은 지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지금 장관급 회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안보전략 TF라고 해서 대행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타워에서 민관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물론 현 정부가 60일의 임기밖에 안 되는 그런 정부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차기 정권 출범 후에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덕수 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조속한 협상을 완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행 체제지만 일단 국익을 위해서, 국익이라는 하나만 보고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각국 정상들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찾아서 트럼프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대행도 필요하다면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장은 장관급 회의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실무자들끼리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고 또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지난번 통화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했지요.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요구를 했다고보다는 서로 관심사항을 얘기했으니까요,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무역 균형 그다음에 조선, LNG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미국 재무부장관이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자금을 대고 향후 이를 구매하는 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LNG 수입 말씀하시는데 그 관련된 건 미국의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거나 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구체적인 어떤 제안과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배 의원**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손해가 예상될 경우 기업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리스크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지금 민관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되는 그리고 또 미국하고의 상호 호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뭐랄까요, 그런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한편 조선업은 경쟁 상대였던 중국이 밀려나면서 한국이 유력한 협업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효과적인 협상 카드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또 조선업계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규제 개혁의 적기로 생각하고 비관세 장벽도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만 막고 실효성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떠한 사항이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따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 분야 또 피해액,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관세 조치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각 분야 별로, 업종별로, 산업별로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이 오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중국의 1위 수출국이 미국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관세 폭탄으로 가장 큰 시장이 막힌 중국이 오히려 EU 등 다른 나라로 수출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의 주특기 아닙니까? 덤핑 공세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우리 수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수출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또 범정부적인 지원이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종배 의원**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반도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곧 관세를 별도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시는 대로 발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관,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와 주요 경쟁을 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도 상시화돼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미국과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종배 의원** 엔비디아 개발자들은 주 80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제로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순간에도 엔비디아, TSMC 주 7일, 하루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재명 전 대표가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제를 그대로 둔 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의원** K-엔비디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종배 의원** 이 전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주변석개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야 먹사니즘, 잘사니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던 조선이나 태양광 등 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분야는 우리에게 블루오션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출국 또 핵심 경제동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 버린 감액 예산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이런 혈세 낭비,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또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일단 시급한 게 속도입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과 AI, 통상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이슈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한편 관세 피해가 본격화되면 수출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도 대선 정국으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정부의 재정 집행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 금년도 재정 집행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안 그래도 2월까지 봤더니 예년보다 못합니다. 그래도 3월 달은 좀 괜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1/4분기 신속 집행한 3월부터는 그래도 지금 2월보다는 양호한 진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매년 보면 첫째, 첫 달, 둘째 달, 1·2월은 좀 늦고 3월부터 진도가 확박 나가는데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공무원들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아닙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어려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부총리, 오늘 12조 규모 추경을 발표를 하셨는데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

로 보십니까? 국회에 언제 제출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제출을 할 거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저희가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당초에 4월 중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현재로는 4월 말, 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늦게 내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또 이번 12조 규모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에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예산편성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12조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필수 예산들,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라든지 또는 필수 특별비 등 이걸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종배 의원**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를 드립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진정한 모습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야 간 대화는 실종된 채 조기대선 승리를 위해 정쟁만 일삼고 초유의 경제위기에도 경제수장을 탄핵한다고 수차례 겁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발 관세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경제부총리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 당국의 발목을 잡는 탄핵청문회를 중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전쟁 속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이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안도걸)

(15시02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앞으로 49일 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접어들습니다. 우리 선조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 온 민주 헌정질서에 무모하게 도전한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3년 만에 국민과 사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국민경제에 남긴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 정부 들어서 경제수석, 부총리까지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 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안도걸 의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 정부의 시작과 끝을 한마디로 결산을 해 보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 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민주당이 오로지 책임지는 21년도 4.6%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평균 1.7%,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네요. 이 숫자는 우리가 실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잠재성장률 2%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다음으로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

21년도에 61.3조 원의 초과세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누적 87조가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세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안도걸 의원** 작년도 조세부담률이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작년도가 18% 정도로……

○**안도걸 의원** 예, 맞습니다. 17.7%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끌어올렸던 우리의 조세부담률을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킨 겁니다.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부진 속에 우리 모든 경제주체의 활력지수가 지금 땅바닥에 있습니다. 가계소비

증가율, 지난 2년 연속 1%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위기 때나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투자, 이것 심하게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2%고요, 전 정부의 평균치 2.6%의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작년에는 1.3% 마이너스입니다. 기업 투자 절대치가 줄어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 23년도에 7.5%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일시 반등했습니다마는 22년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부총리님, 거시경제지표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적 일자리, 상용근로자라고 그러합니다.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산층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제조업·건설업 분야 근로자는 2년 동안 10만 6000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금 보시지요. 명목임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질임금은 3년 전에 비해서 0.7%가 떨어진 거지요.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도 생활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맞고 계시는 겁니다. 파탄 수준입니다. 내수침체가 고착화되면서 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했고 금년 들어 2개월 동안 20만 명이 줄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비중이 작년에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도걸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아직 내수나 그다음에 경제의 어려움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성과를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22년도, 23년도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6% 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출이 마이너스였고요, 그다음에 무역수지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다음에 물가도 안정세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한 오버슈팅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채의 준경계가 심화돼서 이 부분을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년 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매크로 전체 비율이, 전체적으로 가계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부채의 비율 자체가 저희가 2000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체질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지만 저희는 체질 개선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재정 사정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다음에 약자복

지를 했고 그다음에 인구위기에 대응을 해서 소득분배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자체도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이런 오버슈팅이 오래 갔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수와 그다음에 경기에 있어서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최근에 관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리가 더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민생 안정과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표 중에서도 21년 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20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요. 그러니까 21년도는 그래서 4.6%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의원** 그래서 소득이 지금 말이 아니지요. 4분의 3이 최저생계 미만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최저임금 소득 미만? 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부채가 줄었다 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은, 절대적인 부채는 늘고 있지요, 절대치는? 그래서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율이지요.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3배 올랐습니다, 0.51에서 1.67로. 그리고 창업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지요. 2년 만에 23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님 아까 처음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크게 침체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웃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본이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거시경제……

○**안도걸 의원** 그렇지요, 거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아니라고, 최근에 들은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상당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유동성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 그러니까 코로나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작용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고 무겁게 우리 민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이 생각보다 더 오래갔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도걸 의원** 부총리님, 제가 여기서 우리 부총리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변명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생각을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안도걸 의원** 경제적 실상에 관해서 그렇게 정확히 인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 출발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저거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빨리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판도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지키고 혁신적인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연착륙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가 국민의 활로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꺼져 가는 경제를 살려 내는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처방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가 무한 책임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장 견인 정책을 펼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시장이, 기업이 다 알아서 잘한다, 정부는 뒷짐 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방관자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상황, 생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지 않았습다.

자, 그리고 경제 정책 봅시다. 적극적인 통화·금리 정책을 했어야 됐지요. 그러나 금리와 통화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시장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재정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 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갖지요. 첫 번째가 부자감세 정책이지요. 두 번째가 초긴축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발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감세 정책, 왜 추진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저 표를 보여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스로 극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경제 회복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나 약자복지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국가가 역할을

못해서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까 자유방임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통한 그런 경제 활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의 효과는 감세와…… 그러니까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약자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원 확보라는 게 증세를 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나눠 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지금 관세 쇼크라든지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정부가 끝나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설정은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도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국가 무한책임주의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지요. 그리고 성장은 23년에 1.4%, 작년에 2%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87조의 세수결손만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는 과녁 없는 화살이 되고 만 겁니다.

긴축재정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긴축을 했어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고 우리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예산의 경우에는 비리 카르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나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의 현장 이탈 등 연구 기반이 와해되는 교각살우의 참사가 생겼지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의도했던 재정건전성을 달성했습니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하기로 했지요. 달성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올해 예산은 있지만 지금 추정 예산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 과거 이야기를 하시지요. 23년 -3.9%, 24년 -4.1%입니다. 3%에서 크게 벗어났지요. 조세감면 법정한도 3년째 준수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지요? 자, 파면되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시지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 상황을 제가 모르고 저 말씀하신 걸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 다음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그때는 굉장히 초과세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지 아시잖아요. 자산시장이 생각보다 과열이 됐고, 오히려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과거 2년, 저희 정부의 2년 동안 세수에 대한 문제……

○**안도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정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 부총리께서는 계속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밋빛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추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31일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우리가 내수나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나?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글로벌, 그러니까 복합 위기의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나 가계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국채시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정의 규모와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지금은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속도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한 12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 그러면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하셨습니까? 뒷북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축구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4분기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국정협의체에 나와서도 양당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지요? 그때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었어야 되지요?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산업 지원 예산이지요. 그것을 빨리 담았어야 했지요. 그러면 빨리 추경을 실시를 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요, 재정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 부분의 말씀에도 모순이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안도걸 의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왜냐하면 여차피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1/4분기에 집행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걸 의원** 그렇지요.

그랬으면 추경 집행을 있지 않습니까, 1/4분기. 이번에 제대로 집행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신속 집행이 작년보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좀 진도가 늦었는데요.

○**안도걸 의원** 집행률이 역대 최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2월까지, 3월 달까지 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도걸 의원** 2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3월 숫자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3월 숫자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 그리고 이왕에 제가 말씀을 좀 더 할게요.

추경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12조 이것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GDP 갭은 0.5~1.3 이 정도까지 잡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급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의 GDP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 소요액은 35조~130조가 되는 거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

○**안도걸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게 12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채시장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GDP 갭 부분이 무조건 재정으로 메워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도결 의원** 그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도결 의원** 그건 아니고 내수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수가 꺼져 있는데 그 내수를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건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채를 샀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안도결 의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주호영** 안도결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는 허영 의원님의 소개로 춘천 금병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도결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안도결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국민의힘, 경제 다 망가뜨린 주범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말씀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주호영**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안도결 의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바닥입니다. 민간 소비·투자 심리는 급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빈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빈혈 상태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응급구조, 긴급 수혈입니다. 그 정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독일은 과감하게 재정 부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자본이 유입됩니다. ‘이 나라 경제는 살아나겠구나’라고 해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환율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시장에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정책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찔끔 추경, 무늬만 추경으로는 정부 재정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정부가 저지른 경제 실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질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의 정책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구조적 전환기에는 유능한 국가의 역할, 응급구조사, 경제 해결사 역할이 긴요하다는 겁니다.

○부의장 주호영 안도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안도걸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실패에 대한 경험, 과거 경험에 대한 숙고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제도 설계와 성과 검증이 없는 무모한 선무당 정책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깊은 내상을 입히는지 이번 정부가 추진한 교육·노동개혁, R&D 투자 정책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정책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 반응을 경청하고 그에 맞춰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시장의 반응에 귀 닫고 정책 수요자들의 정당한 저항을 힘으로 누르려는 독선 행정은 정책 실패와 국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정권을 넘어서는 정책 승계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로 뉴딜 투자, 벤처 투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우리 경제의 미래 활로를 여는 정책이 일거에 척결되었습니다. 경제에는, 정책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정책은 100m 달리기와 아니고 계속 도는 계주입니다.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한 개를 찾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결실을 보게 하는 게 백 개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의 공과를 냉철히 분석·평가해야 합니다. 오직 국가와 미래의 관점에서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안도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의석에서 개입하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서범수)

(15시28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 조금 자제하세요.

(「아니,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이 회화화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자제하세요.

(「회화화가 아니고요, 분노합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서범수 의원 저도 좀 합시다, 서영교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에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계시다시피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 모든 공직자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고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서포트해야 할 정치는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횡과 횡포, 특히 삼십 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주가와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고 물가는 매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상이어야 할 보통의 하루가 가장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보통의 하루가 이제는 워너비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들께서 의지하고 쳐다보는 곳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중심을 잡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기 대선, 정권 교체기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은 물론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다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불확실성입니다.

○서범수 의원 불확실성이겠지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경제 주체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또한 우리 경제 당국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의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대표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특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해 버린다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범수 의원 헛갈리는 거예요? 몰라서, 헛갈려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하셔서 못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지요.

○서범수 의원 저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진짜 헛갈립니다.

민주당 의원님은 아십니까?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생지원금이든지 지역화폐든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포기에서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률적,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금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최근 일본의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일인당 최대 10만 엔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찬성이 37.5%, 반대가 55.3%로 나타난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 55.3%의 주요 이유가 선거 목적의 퍼 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에 한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범수 의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1야당 대표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52시간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요건에서 저희가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는 것의 의견이었습니다.

○**서범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가 올 2월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기업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누구 말대로 ‘그때그때 달라요’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또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모호함을 통해서 아예 예측 불가능한 것은 우리 부총리님의 아까 말씀대로 불확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1당 대표가 오락가락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기재부 해체론을 들고나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저도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서범수 의원** 기재부는 위축되지 마시고 어떤 정권의 기재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재부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다음은 산불 피해 대책 관련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유례가 없는 큰 규모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범수 의원** 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라든지, 대형 산불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재입니다.

○**서범수 의원** 인재입니까? 뭐 여러 가지 실화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기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컨트롤타워 재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 과학 기술 기반에 입각한 대응체계 등 산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싶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만 오늘 12조 추경을 말씀을, 발표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것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전체가 12조 규모고요.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재해·재난 부분에 3조 원 좀 넘는 규모이고 그다음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 플러스알파 그다음에 민생 지원에 4조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부분에는 재해대책비가 지금 한 500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예년의 2배 이상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헬기 6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저희가 추가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과 AI 관련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25조 원 하기 위한 종잣돈으로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AI 분야에 대해서 일단 추경에는, 원래

저희가 지원하는 자금이 있지만 1.8조 원 정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위한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조 원 규모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10조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관계 부처나 그다음에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채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상황을 판단을 하고 해서 한 12조 원 수준으로 저희가 제출을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의원 산불 피해 복구는 3조 원 예산 책정한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산불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집계 중이기 때문에 한 4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서범수 의원 4월 말에? 그래도 리프하게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리프하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서요. 그래서 추경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의 그 숫자는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 만약에 추경이 없이 25년 예산, 본예산 중에 피해 복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제가…… 원래 목적예비비가 1.6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여유가 한 30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런데 기정예산에 3000억 정도 있는데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는 돈이 지금 한 4000억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범수 의원 고교 무상 이런 것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고교 무상이 아니더라도요. 아니더라도 의무지출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부처에서 받아 보니까 그게 한 9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예비비 1조 6000 중에서 한 4000을 빼고 그다음 선거보조금에다가 목적, 원래 의무지출 비용을 하려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재난에 쓸 여력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래서 기정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앞으로 올해 또 연간 중에 재해·재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도 좀 담았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러니까 예비비 관계없이, 그러니까 추경 관계없이 지금 현재 피해 복구 예산으로 당장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비비 말고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범수 의원 그런데 만약에, 작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목적예비비가 1조 깎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피해 복구에 긴급한 것은 바로 쓸 수 있을 상황이 됐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뭐,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 재난을 예측하기 위해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런데 지난 예산안 통과를 시키면서 싹둑 반으로 잘라 버린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재정 당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것을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런 예비비를 싹둑 자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무슨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서범수 의원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있었으면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뭐……

○서범수 의원 그래서 지금은 산불 피해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발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마음으로 서로 협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의원 그리고 부총리님, 이번 산불 사태에 국민 성금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1000억 정도……

○서범수 의원 1328억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역대 어느 사태, 사고, 사건보다 많이 모였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처럼 민간에서도 역대급 성금이 모였는데 정부에서도 역대급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현재 산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의원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택이 전파됐을 때 2000만~36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부총리님 같으면 집을 또 한 채 지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의 예산들을 활용하고 기준도 과거 기준을 포함해서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잘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 농기계라든지 산림 채취물 그리고 중소기업 피해. 이게 사실은 보상을 할,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게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하나하나 좀 살피셔서 이게 하나하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다시 일터에 가서야 되는 분들이 힘을 내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뭔가 국가에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정부가 되어 줬으면…… 이 때까지 정부는, 정부라 하면 늘상 차가운 정부, 냉혹한 정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따뜻한 정부로 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각별히 좀, 직접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 차례 현장에 갔었습니다. 상당히 고령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맡으셨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그리고 지금 미국발 통상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가장 치명타를 받는 자동차 1차 밴드 죽 가서 간담회를 하면 의외로 통상전쟁은 닥쳐야 될 일이고 또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9일 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범수 의원 사실은 작년에 탄핵 정국 때문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좀 타 주셔야 된다, 정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왔다 갔다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지금 고용부가 주무 부처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같이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예.

과기부장관님, 시간은 다 됐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및 지정 국가로 우리가 지정이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내일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의원** 오늘 4월 15일 날 발효 안 되는가요, 미국 날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서범수 의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일단 저희가 아는 바로는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러저러한 민감국가 세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만 어쨌든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지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우리 과기부나 외교부에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과거의 예로 봐도 지정이 되고 또 수개월 후에 해제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마 미대사관에 있는 주재관들이 좀 활동을 못 했거나 아니면 인력이 감축돼서 이런 것을 감지할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정확한 요인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서, 단지 지난 십여 년 동안 에너지부 아래에 연구소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한 2000명 이상의 고급 두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연구 보안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좀 더 강화하고 또 미국의 그런 파트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함을 줬다면 완화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여러 가지 한미관계,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 과기부에서는 외교부와 좀 잘 협조를 해서 빨리 탈피를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조속히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다고 정부가 좀 냉철하고 냉혹한 정부에서 따뜻한 정부로 변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내 가족과 같이, 내 식구와 같은 마음으로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끝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서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주철현)

(15시50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현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정권은 3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내란수괴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고도 대통령 관저에서 일주일간 무전취식하며 버티더니 사저로 돌아가며 내뱉은 첫마디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기괴한 현실 인식과 정신 승리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국헌문란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 중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복은 정녕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해보니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던데 부총리님, 한 대행이 실제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담회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 들리는 이야기로 실제 예사 배경이라든지 의견을 물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명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했다고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주철현 의원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회의는 참석했습니다.

○주철현 의원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 다음의 2인자인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 않고 간담회이기 때문이에요.

○주철현 의원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담회이기 때문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명한다’ 이렇게 통보했다던데 다른 이야기 들으신 게 있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요. 제가 옛날에, 제가 대행을 할 때 국무위원 간담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주철현 의원**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는 정도이지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보통은 통상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법률사항이니까 법률 전문가가 또 국무위원 중에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 정도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의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또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도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결정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부처가 발간한 공식 지침서인데 이에 따라서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철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심지어 한 대행 본인도 작년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랬던 한 대행이 불과 석 달여 만에 본인이 내뱉은 말도 깬 그리 잊어버릴 만큼 인지능력장애가 있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철현 의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총리로서, 정부 2인자인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제가 그 부분의 생각을 많이 안 해 봤습니다.

○**주철현 의원** 아이참……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탄핵하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 달 가까이 거부했습니다, 부총리 본인께서. 그랬던 본인에 당연히 임명 반대했어야 되는 것,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그 전까지야 헌법 규정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탄말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거의 한 달 버티셨어요, 임명 않고.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인해 주신다면…… 사실 지금 경제 질의고요. 제가 또 그런 것 관련해서 내일 법사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아니, 국민의 대표가 묻는데 무엇을 묻든 획이 그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양해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철현 의원**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현 의원**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한다니깐요.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내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 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를 동의를 구한 것처럼 대국민에게 새빨강게 한 거짓말 또 말 바꾸기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철현 의원** 내란세력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으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공공기관 인사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 대부분이 부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처 기관에 1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주요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됐는데 기관 내부 출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과 연결된, 연계된 인물들입니다.

일례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작년 12월 11일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윤석열 캠프 고문을 맡은 유종필 전 국민의힘 관악갑 당협위원장은 올 2월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한국마사회장에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문이자 검사 선배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희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김인중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차관 등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내정 또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당시 권한대행이던 우리 부총리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권한대행일 때 하지 않은 것도 말씀을 여러 개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전에 내정하거나 추천한 인사 또 대통령실이 주문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국힘당에서 추천한 인물들 그런 분들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시의 장관들께 물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하여튼 주무장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된 권력이 임명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 원칙입니다. 정상적으로 선

출된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취임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주권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썽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비었을 경우에 어떤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부처의 공직자들은 지금 시기에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당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알박기 인사가 강행된다면 이는 상부 압력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사일수록 공모 과정에서부터 추천이나 심사 과정까지 인사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부처 장관들은 진행 중인 알박기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표현이, 지금 알박기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일단 관련 절차에 따라서, 장관들이 판단을 해서 장관들이 제청을 하면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철현 의원**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는 내란 이후 권한대행 체제하의 알박기 인사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서 샅샅이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유화산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에 좀 과잉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해외, 지금 우리 경쟁 국가의 과잉 설비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유화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주철현 의원**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동의합니다.

○**주철현 의원** 이런 중차대한 유화산업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추진해 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작년 말에 이 업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막혀 가지고. 새벽에 제가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목이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기본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하고 업계에 자율컨설팅을 맡겨 가지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협의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기보다는 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자율사업재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정부가 작년 발표한 대책은 뭐 당연한 목표만 제시했고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업계가 원성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정부와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 윤석열 내란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유화산업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업체별로 사업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너무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가지고 오는 사업재편 방안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구조조정 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유화협회가 컨설팅을 의뢰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유화산업 불황이 최소한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에야 글로벌 수급·증설 균형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례 없는 과잉공급에 따라서 단순한 버티기로 경기 반등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대응이 늦을 경우에는 최적의 구조 재편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어떤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중장기적인 R&D 투자를 위해서 기술력을 올려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선부르게 어떤 기업을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재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중국도 작년에 산업 구조조정 지침을 통해서 유화산업 증설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장의 설비 개조를 권고했구요. 일본도 선제적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 36% 감축 또 업체 간 통합과 설비 합리화, 스페셜티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장관님처럼 아무것도 않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주철현 의원**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산업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지금 업체나 산업계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줄여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우리 지역에서는 유화 대기업들이 투자액의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뒀고 또 R&D 투자나 사내유보는 거의 없고 그냥 대주주들이 빼먹기에 급급해서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적자가 지속되면 손 떼고 떠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산자부가 발간한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 현황을 봤더니 유화산업의 R&D 투자 비율이 2.34%더라고요, 매출액 대비. 전자는 11.47%입니다. 의료·의약품은 9.24%, 자동차는 4.14%, 업종 평균 4.41%인데 유화산업이 훨씬 낮아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재계의 원성이.

유화 대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자구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꺾는 산업 부분으로서 불과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캐시카우로 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지금 사업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시점에 너무 과격한 조치가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산업계에서 가지고 오는 안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한번 해 보고 다음 단계에 가서 필요한 부분은 더 필요한 구조조정 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장관님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총 에틸렌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증설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자급자족하고 수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속가능하겠어요? 지금 문제는 모든 석유화학 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범용 제품 에틸렌의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주철현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이면 백 사람 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맡겨 놓게 되면 자율적 구조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력 동원해서 조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업계나 산업계에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속도를 내고……

○주철현 의원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경쟁 기업끼리 구조조정 맡겨 놓으면 합니까? 절대 않습니다. 현실 좀 눈 뜨시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울상인데 그래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을 했어요. 조만간 발표된다는데 당연히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지난달 말에 현지 실사까지 마치고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선정돼서 지원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동이 돼서 구조조정 재편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주철현 의원**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는 파면됐지만 아직까지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다시 한번 엄정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주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종욱)

(16시10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욱입니다.

정치가 어지러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는 결코 퇴보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이재명 전 대표 총선 출마 영상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부분적으로만 봤고 풀 영상은 못 봤습니다.

○**이종욱 의원** 그 영상에 보면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썄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 한 게 자유방임인지 건전재정 기초 한 게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드리는 전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끝나는 과정에서 내수나 민생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안도걸 의원님 말씀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글로벌 복합위기였기 때문에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기를 극복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신용도를 사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때 있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요, 가계부채라든지 아까 매크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의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

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정부가 하는 약자 복지 그다음에 인구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을 쓰는 거니까 당장 효과가 있지요.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분배 지표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출생률도 반전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위기 극복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구조개혁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정부 출범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관세 충격 때문에 지금 민생이 더 어려워진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이종욱 의원 지난 문재인 정부는 참 복이 많았습니다. 초과 세수였고요. 그런데도 코로나 핑계 대고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사실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세수 결손 등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께서 큰 선물을 남겨 주고 갔다고 했지만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엄청난 부담과 숙제를 물려줬습니다. 그것을 해결한다고 임기 내내 고군분투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4+1 개혁에 대해서는 미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미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동개혁 같은 경우 노사 법치의 관행을 좀 자리 잡게 했든지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연금개혁도 지금 저희가 돼 있고 교육개혁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틀은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 우리 사회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성과는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재해대책 목적예비비가 얼마지요? 사용 가능한 숫자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목적예비비가 현재 한 1.2조쯤 됩니다, 현재로는.

○이종욱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걸로는 원래 2.6조 요구했고, 1.6조가 됐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무상교육을 사전에 확정해 놓은 게 있어서 실제 가용가능한 거는 4000억으로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 산불대책 하면서 예비비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처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목적예비비 4000억 중에 많이 썼지요? 이제 거의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일단은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마크

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서 한 2500억 원 정도……

○이종욱 의원 2500?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각 부처의 추경예산으로 지금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재해대책비 같은 게 아까 5000억 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00억에다가 한 3000억 하니까 8000억 원 정도를 지금 어떻게 말하면 추경과 본예산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 그래서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예비비 부족 논란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종욱 의원 앞서 다른 의원 질의에서 ‘금년도 25년 예산이 증액을 못 한 불완전한 예산이다. 증액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그런 예산이었고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종욱 의원 그리고 사실은 증액을 협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작년에 예비비,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제가 국회에서도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욱 의원 그래서 사실 예비비 논란과 관련해서 산불 대응 과정에서 또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가지고 언론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예비비 삭감한 잘못은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 필요하면 추경 해라. 부처 재해대책비도 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치고요.

부총리님, 예비비는 사실 예기치 못한 소요에 쓰기 위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그런데 불용되는 건데 왜 무리하게 삭감해서 이 난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불용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아닙니다만……

○이종욱 의원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종욱 의원 예산상에 이자가 계상은 되지만 실제로 예비비라는 거는 차입해야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께서 지난 12월, 예비비 삭감이 언론의 쟁점이 될 때입니다.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쓰지도 않는 예비비 절반 정도 깎아서 나랏빛 갇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라고 발언했습니다. 부총리님 맞는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뭐 제가 그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예비비는 필요하면 그때 차입하는 거고 미리 빌려 가지고 금고에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아버지 공부 좀 잘 시켜 주세요.

(장내 소란)

자, 아버지 말씀 나오니까 또 시끄럽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 초선의원이고 첫 번째 대정부질문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조금 봐주세요.

(「그러니까 맥락을 좀 맞춰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당초보다 한 2조 원 정도 증액하셨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증액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고루고루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재해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 분야에 고루고루,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35조 정도 자체 추경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늘릴 여지가 있는지, 왜 12조밖에 못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 교역 질서의 불확실성, 대내외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 업종이나 이런 데에다 지원을 한다면 하는 방법들을 해 나가는 건 맞는 것이고요.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버티기 어려운 민생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에는 저희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국채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희가 추경이 통과가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해서 한 12조 정도를 잡고 국회에 제출을 곧 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의원 저는 사실 12조,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재정수지 결국 3% 넘어섰지요, 이번 추경 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관리재정수지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였지요, 5년 연속 못 지켰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 금년 예산이 -2.8인데 이번에 추경 하면 또 3 넘습니다.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보탬 말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저는 건전 재정이란 말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민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통상 전쟁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를 약간 넘는 거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욱 의원 글썄요, 6월 대선 하면 새 정부에서 분명히 또 추경 할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지만 금년도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정준칙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큼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5년 6년 계속 재정준칙 어기고 100조씩 재정 적자를 쌓아 나갈 때 대외신인도에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위험성을 지적하지는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위험성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피치가 작년에 한 두 번 정도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또 어제 무디스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기본소득제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 경제팀에서는 마지막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욱 의원 그런데 국회에 오면 또 추경 규모가 늘, 가능성이 저희는 100%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사업 신규 소요가 많이 발생을 한 만큼 기존 사업 중에서도 사정 변경으로 일부 삭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이 라든지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노력도 시간은 없지만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통상적으로는 연초에 하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금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세 부담 완화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근로소득세인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법인세수는 주는데 왜 근로소득세가 느냐? 월급쟁이가 봉이나?’며 기본공제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월급쟁이가 봉입니까, 부총리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근에 근로소득세 같은 경

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착시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비중이 한 33%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제가 알기로 OECD 통계상 실효세율은 저희는 OECD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의원 그리고 PPT 화면 보시지요.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근로자 2085만 명 중 689만 명, 한 3분의 1 정도가 면세자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나머지 또 3분의 1 정도, 699만 명은 1년에 100만 원도 안 냅니다. 남아 있는 3분의 1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95%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께서 기본공제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유력 대선주자의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욱 의원 알겠습니다.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또 각종 공제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기재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종욱 의원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트럼프 관세전쟁, 내수침체,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입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거듭해서 재발의하는 법안을 보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노조는 불법파업으로 회사 자산을 때려 부셔도 회사에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쌀이 과잉생산 되어도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예산으로 다 매입해 줍니다. 소액주주는 투자하는 회사 주가가 하락하면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나빠지면 국가에서 개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을 시원하게 풀어서 지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좋으면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 좋은 걸 대통령이 왜 반대합니까? 농민,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약자를 위하는 척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유혹하지만 실상은 시장경제 기능을 왜곡하고 시장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동의해 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 52시간 근무 외에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권을 넘기고 회사가 해외로 이주하여도 상속세율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과 부자를 악마화하고 국민을 불신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반기업·반시장 문화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기업을 키울 생각은 않고 적대시하는 이런 약탈경제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은 국가재정을 거덜 내자는 나랏돈 퍼먹사니즘이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출마 선언은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공격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시장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이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정호)

(16시29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경남 김해읍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락국 왕도 경남 김해시를 김정호 의원입니다.

국민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0%대, 충격입니다. 정치란 결국 먹고사는 문제일 것인데 제발 좀 살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들의 아우성을 되새기면서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의 제조산업 부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국에게 보복관세를 무차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산업 대기업들은 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확대하니 국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줄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소비가 줄고 내수침체가 심화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려 120만 명이 줄폐업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대폭 늘어나 민생이 파탄에 빠졌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12·3 친위쿠데타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재야,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 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그러나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를 책임질 능력도 비전도 없는 정권이 3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경제 폭망의 지표는

참혹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서 신속하게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4일 국무회의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김정호 의원 한덕수 대행의 ‘저에게 부과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 발언도 들으셨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의원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으로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심판의 대상인데요.

마지막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호 의원 아니,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호 의원 관세 대응은 없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관세 대응도 있었지요.

○김정호 의원 있었지요?

마지막 소임은 50일 채 안 남은 조기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90일 유예가 됐고, 5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이 조금하게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90일이라는 게 90일 남았기 때문에 50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삼사십 일 동안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어차피 이견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관료조직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간기업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저쪽하고……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하고의 어떤 협상의, 국익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일단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성급하게 대선의 뭔가 실적 홍보용으로 미국에 퍼 주기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의원 혹시 그때 배석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배석은 안 했습니다.

○김정호 의원 배석은 안 했고, 그때 통화 내용은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뒤에 브리핑 받았습니다.

○김정호 의원 브리핑 따로 받으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정호 의원 혹시 기억하고 있는 특이한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의원 알래스카 LNG 가스관 합작 투자, 혹시 이것 부총리께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되어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은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17년도에 가스공사가 이것 관련해서 투자를 해 보려고 검토도 하고 MOU까지 체결했어요. 그때 부총리가 박근혜정부 경제비서관 하지 않으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그때 별도 보고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라서요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호 의원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정호 의원 이게 적절한 협상 카드, 관세율을 좀 낮출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에서 그 부분을 희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주지사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들고 다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건 지방정부의 얘기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 LNG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랑 어떤 틀에서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차피 양 정상 간의 얘기에 있어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선불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든지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거를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정호 의원 그렇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정호 의원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 엑슨모빌이나 BP나 이런 데서 경제성이 없다고, 난공사이기 때문에 다 철수했어요. 가스공사도 물론 17년도에 포기를 했고요. 그런 만큼 이게 관세 협상의 카드로 적절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저희가 협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어쨌든 부총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조기 타결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오로지 국익만이 저희가 판단하는 그 준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의원** 핵 민감국가 지정이 오늘부로 발효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아마 미국 시간이니까, 아까 과기부장관님 말씀이…… 일단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입니다.

○**김정호 의원** 지정 사유나 배경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좀 기술적인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보다는 과기부장관님이 좀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의원** 그게 미국 에너지부 소관인데 과기부 관할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의원** 아직까지 설명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유, 배경은 듣지 못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저희가 그 실무자들이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효가 되는 것은 원래 예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입니다.

○**김정호 의원**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나 시설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에 사전 신청,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정호 의원** 이게 어떤 영향을, 파장을 미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굉장히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좀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미국 측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정상적인 협력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과학기술 협력은 미국 측에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자칫 규제가 된다는지 과잉스럽게 우리 과학기술자들에 불이익이 돼서 양국 간에 서로 상호호혜적인 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연간 몇 명 정도 연구원들이 미국 기관에 방문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숫자를 아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김정호 의원** 대략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과거보다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만일에 이게 그냥 보안 사고를 일으킨 용역 직원의 개별적인 정보 유출 문제라면 그 개인을 입건하거나 의법 조치하면 될 일인데 왜 국가 전체를, 한국 정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걸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국가 전체를 지정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연구기관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침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지정이……

○김정호 의원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연구원들이 한국 관련된 기관에 방문을 해도 사전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복잡하고 민감해진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왜 한국 정부를,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 여러 가지로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재처리 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이미 미국 정부가 경고를 했음에도.

두 번째는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승인도 받지 않고 체코 등 유럽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가 독자 기술이고 독자 수출하겠다고 해서 계속 강행하면서 이게 미국의 핵 통제권 밖에서 기술 유출이 될까 봐.

세 번째가 이렇게 미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정부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3년도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때 선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이 그 선언 내용에 핵확산금지조약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새삼스럽게 천명을 했어요.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원전 수출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 통제하는 민감국가 지정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

보다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끊임없이 국지전을 도발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반대로 안 됐고, 결국 비밀리에 군대를 동원해서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좀……

○김정호 의원 시간이 다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정호 의원 핵 정보 기술 유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나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전략적 결정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초한 완벽한 외교 참사,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민감국가 해결하는 데 유능하게 해결해 보이겠습니다. 경제안보도 민주당

이 잘 해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행일 때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얼마나 강한 증거를 갖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다 공개되는 석상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혹시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관계관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우리 산자위 상임위에서 한수원이나 산자부장관이나,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 차례 자료제출이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 상임위에는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당신들이 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정호 의원 부총리께서도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단언하시지만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어찌시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김정호 의원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서 책임질 수 없겠지요. 그렇게 현재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모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김정호 의원 적어도 국회의원들께, 국회에게,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될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얼렁뚱땅 모른 척하는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감국가 해제 가능하겠어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 배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민감국가 해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

○부의장 주호영 김정호 의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네요, 하다 보니까.

하여튼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시기에 답답하고 또 의혹이 가는 부분들 많습니다, 국정에.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정말 거짓 가짜뉴스를 너무 양산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팩트 체크하려고 무던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정말로, 시쳇말로 개무시하고 지금까지 묵살해 왔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기해도 아니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의 위상은,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익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성훈)

(16시51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부산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경제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과 관련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세계 무역 질서를 지탱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시스템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원팀이 되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될 이 국가적 위기에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공격은 자해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바로 경제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헌법과 국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지만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경제가 정쟁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총리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부총리님에 대해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과 같은 막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일 법사위에서는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 이거는 경제 질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의원** 지난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 딜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와 관련된 방위비, 관세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의제에는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여기서 또 정략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 관세전쟁마저도 전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 퍼줬다라고 하는 의심부터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정상 간의 통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이 아니고 타협으로 가자, 협상으로 가자, 그리고 큰 틀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의원**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축소지향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상호관세율만 보더라도 우리는 20개 FTA 체결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호관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재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여력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을 할 거라는 그 멘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정부랑은, 지금 사실 품목별 관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호관세가 있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어차피 이것도 미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전략을 노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관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과 LNG와 무역 균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상 전략과 그다음에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는 정상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장관급과 그다음에 실무자급들이 만나서 소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제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 온 미국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달러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 자산에 대한 이탈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지금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의 복귀라고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거는 무역수지인데, 또 미국의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달러 중심의 자본거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월가와 메인 스트리트 그다음에 금융 자본가와 그다음에 노동자, 아마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그렇게 과격한 변화는 분명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또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90일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밀고 당기는 이런 전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 보시면…… 국익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달러 패권이냐,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상당 부분이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의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전략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의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급락을 하고 또 미 10년 장기 국채 물의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리 발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시절부터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권한대행이던 시절 또 지금의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논을 서로 나눠 봤었는데요. 더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야당 의원의 질문 중에서도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 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 3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스물아홉 분 정도가 계십니다. 특히나 오는 6월 4일이면 무려 3대 정권을 거쳐서 현직에 재임하는 기관장도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치적 공세라고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성훈 의원**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0년 장기 전세를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를 했습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으로서 국토보유세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철회를 했는데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정책들, 심지어는 부동산 포폴리즘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차피 대선 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건설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훈 의원**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값은 강한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통화량, 물가,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성훈 의원** 부총리님께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우선순위를 매겨 보면 분명히 다섯 가지 중에 이것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을 해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투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하고요. 최근에 통상 이슈가 나오는 것들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게,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고용의 문제고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떤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충격, 흔히 말하는 관세 충격이라고 보는 부분들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규제 완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어떤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의원**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상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지금 현 정

부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기업 지배구조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 필요하단다.

다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거나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상황을 봤을 때 일단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본거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한테 좀 더 맞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 법인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을 통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 정부의 그 생각은 확고하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반기업적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불법과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불법과업 조장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또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총리님,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인 입법독주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계속 말씀하시지요.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시지요.

○박성훈 의원 이러한 악법들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란을 저지른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을 소리를 해야 듣지요」 하는 의원 있음)

(「들을 소리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의장 주호영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의원님, 노종면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세요.

○박성훈 의원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지요.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일률적·일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또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하고 현안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너지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 낼 수 있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만이 정의라는 편협한 이념에 기반해 선동의 깃발을 휘두르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실용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상황에 맞춘 말 바꾸기로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쟁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말로는 성장과 실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고 산업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혁신의 싹을 자르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의 숨통을 조여 온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 기만을 넘어서 자기 부정을 하려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성장을 말하는 이재명은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편 가르기의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의 가치는 행동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혼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경제를 살릴 리더십,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지킬 국가 전략,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용 정치가 절실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여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우원식 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승원)

(17시11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동시에 위협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무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국민보다는 자기 정치,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한 총리는 지금 대선 출마를 꿈꿀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민생을 살핀다는 핑계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생은 국회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지금 당장 국회로 출석하여 경제 회복 및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외교·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말은 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내란수괴의 부역자로 역사에 남을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지 선택하십시오.

한편 한 총리는 보은을 위한 알박기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정 혼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지금은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릴 기반을 조성할 때임을 국무위원들께서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12·3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 위에 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부를 대표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안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최상목 부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국민의힘 정말 3년 내내 민주당 탓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타령하고 민주당 타령하고,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그러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김승원 의원** 아니, 아까 박성훈 의원님이 계속 민주당 탓, 전 정부 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김승원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알박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 인사를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에 4월 11일까지 대행들께서 공고해 낸 게 101건입니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임원에 대해서. 그게 알박기 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사람이 2년이나 있었는데 쫓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뺄줄을 내 갖고 돌려보내 갖고 그 인사를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있게 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그냥 뒤죽박죽 해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조차도 알박기 인사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민주당 탓을 하는 것, 그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할 바도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박기 인사,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49일이면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을 하는데 3년짜리 인사를 갖다가 지금 공고해 갖고 지금 임명하겠단?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철학을 모세혈관 같은 곳까지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논의랄까요, 한덕수 총리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때 간담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김승원 의원** 간담회는 없으셨고 국무회의는 참석하셨다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국무회의는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원 의원**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설명을 하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회의에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김승원 의원** 그러면 혹시 뒤에 계신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사전 간담회 때 현장에 계셨던 분 혹시 손을 드실 수 있습니까?
(손을 드는 국무위원 있음)

두 분 계셨고, 세 분 계셨고……

잠깐만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원 의원** 유상임 장관님, 혹시 잠깐만……

아니, 저희가 이러한 이유가 이게 12·3 내란 사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불법계엄 선포하기 전에 사전에 대기실에서 계엄을 갖다가 그제서야 얘기하고 장관님들은, 국무위원들 허겁지겁 이게 무슨 난리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나가서 불법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묻던가요? 혹은 장관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권한대행께서 두 분을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간담회 때 말씀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국무위원들이 간담회 자리니까 어떤 의견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의사를 말씀은 안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고 그런 차원에서 행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다른 이의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김승원 의원**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던가요? 설명이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다른 한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이 법제처장님은 늘 국무회의에 같이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늘 법률적인 부분에 많은 조언들을 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적절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정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의원** 아니, 그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기, 대학 친구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치를 할 때 그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아주 무리하게 제공한 사람인데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법적 지식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인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이것도 알박기를 해 갖고

나중에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썄요, 그때까지는 법제처장님이 그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사할 이유도 없었고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그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승원 의원** 좀 답답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이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랑한다는 동생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다시 임명 강행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임기가 아직 한참 남은 대통령기록관장을 윤석열 행정관 출신으로 교체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돌이켜 보면 박근혜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다음 정부에 인수인계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잘 모릅니다.

○**김승원 의원** 100페이지 정도랍니다. 4년이 넘게 일을 한 박근혜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100페이지 정도의 자료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목록이 6~7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싹 소각, 파훼, 파기해 버렸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기록관장도 행정관을 임명한 것이 많은 자료들은 파기하고 그나마 기록물로 간 것도 본인의 행정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숨기거나 어떤 훼손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사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부끄럽든 그렇지 않은 간에. 그걸 갖다가 파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데 제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김승원 의원** 견해를 묻는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기록물관장으로 가서 역사에 남을 사초를 파기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어떤 공직자의 공직 수행에 있어서 그분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그걸 지레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의원** 4월 8일, 이게 지금 국무회의 있는 날인가요? 4월 8일이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에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비공개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출마할 것인가라고 하자 한덕수 총리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유출했다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형 선고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원 의원** 한미 간, 예컨대 권한대행과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는 몇 급 기밀에 해당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일단 기밀일 것 같습니다만 몇 급 기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상당히 중요한 기밀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원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중앙일보에 유출이 됐어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조사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오시면 총리를 대신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질의요구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가지지를 못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그 내용에 또 보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원 스톱 쇼핑을 했다, 많은 양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미국 측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그다음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대규모 구매,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방위비. ‘One stop shopping is a beautiful and efficient process’. 얼마나 좋았으면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백악관 경제의장이 ‘많은 양보를 얻어 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퍼 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양보한 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표현……

○**김승원 의원** 저건 누가 봐도 한국이 많이 양보를 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지금 표현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김승원 의원** 표현 방식이, 그러면 저게 우리의 양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신다는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왜냐하면 정상이 30분 통화해 가지고 뭘 양보 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승원 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바이든 대통령 때 2024년 10월에 협정이 체결되었고 우리 국회에서 11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의원** 이거 재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다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김승원 의원 아니지요, 양국이 합의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러니까. 그런데……

○김승원 의원 서로 합의해야 되지요. 우리가 합의를 안 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위비 협상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원 의원 확실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원 의원 좋습니다.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걸 지키거나 혹은 유리한 협상을 받아 내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승원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 인수한 지 10년 만에 홈플러스는 쑥대밭이 되었고 지금 긴급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점포는 폐점이 되고 직원은 감축되었으며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까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4일 어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MBK가 있는 사무실에서 식발식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마도 구조조정 없는 정상화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구조조정 없는 정상화, 점포 매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겠지요? 일자리 보장이겠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승원 의원 그것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건 뭐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회사가 노조와 또 채권단하고 잘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지금 MBK, 홈플러스가 긴급 회생 신청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700억 원대 그다음에 단기채 700억~800억 원대 판매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그것 범죄로 볼 수 있다.

예전에 동양증권 사태, 현재현 회장이 그와 비슷한 짓을 했다가 징역 7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그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아직 결과는……

○김승원 의원 그것 범죄행위가 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거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언제 결과가 나오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언제요, 대략?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직 예정하기는 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승원 의원** 지금 사모펀드사들이 예컨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한 후에 수익성 낮은 노선은 폐지하고 또 100억대 적자 상황인데도 수십억 원에 배당을 해 가서 이익을 챙기는 등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듣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이것에 대한 방지책도 금융위원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지책이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사모펀드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부분과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관 부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사모펀드의 공과를 한번 점검을 하고 최근에 해외의 어떤 규제 동향도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다른 산업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그래서 국무총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관계부처가 잘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장인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런 것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놀이 하고 있고 광주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금융위원장 김병환** 부처랑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49일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종민)

(17시30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세종갑 출신의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갑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20여 년 공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소기업 어렵고요. 예전에는 자영업, 중소기업 어려우면 대기업은 좀 괜찮았습니다. 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대한민국 주력 산업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워도 수출기업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수출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경제적 상황은 정말로 대격변입니다. AI나 그린에너지 이런 기술 변화도 있지만 미중과의 협력 시너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는데 미국·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재앙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 재앙을 어떻게 돌파할지, 국가 전략이 있는지 답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는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이끌다가 마지막에 계엄이라는 자폭까지 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정부를 상대로 경제 질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두 달 후의 새로운 정부는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계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러 가지 민간연구소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4/4분기하고 1/4분기의 성장률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한 1% 중반 이상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폭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요인에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치가 1.9에서…… 작년에 1.9였잖아요, 계엄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종민 의원** 그런데 1.5로 수정했어요. 0.4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GDP로 계산하면 한 9조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을 해 버린 거예요, 계엄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수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것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방법 없나요? 이것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제가 경제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안정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저는요, 국민들이 돈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거나 하는 이게 더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경제부총리께서 계엄에는 가담 안 하셨다니깐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걸로 인한 민생의 피해, 대한민국 경제 역량의 훼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어떨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의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국회에서 여러 번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사과가 제일 쉬운 사과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함

니다. 제가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가진 최선의 혼신의 노력을 해서 민생 안정과 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공직자 얘기하시는데요, 이 사과 말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과에 따르는 행동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하실 때 헌법재판관 임명 계속 미뤘잖아요. 지금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1명 임명해 버렸어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런 정치 행위를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이 될까,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그렇게 볼까요? 아, 이것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까요? 행동이, 사과에 따르는 행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나간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사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한 대행이 4월 8일 날 트럼프와 통화를 했어요. 상호관세 80일 유예 받아 냈다 이렇게 약간 자화자찬했는데 이거 잘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는……

○**김종민 의원** 90일 유예 받아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90일 유예가 그 뒤에 발표됐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아니, 이거 모든 나라한테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전화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다음에 스마트폰·PC 상호관세 면제 이거 사실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 이거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이게. 아니, 스마트폰·PC 상호관세는 면제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시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건 품목별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러면 이게 무슨 면제예요? 아니,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PC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에 상호관세 매기면 이게 무슨 상호관세 면제입니까?

한 달 후에, 상무부 장관이 발표했네요. 한 달 후에 반도체 상호관세 협의하겠다고. 아니, 이런 걸 무슨 잘했다고 이걸 내놓습니까?

이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Great Call)이라 그랬대요. 그레이트 콜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 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같이 우리 동맹 국가일 경우에 협상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정상 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이라서 이제부터 장관급 협의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 아니에요. 경제 수장께서 그거 미국하고 할 때 외교적으로 하는 언사로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작전회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레이트 콜이 아니고 그레이트 세일(Great Sale)한 겁니다,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 상대로 해서.

지금 상호관세 유예도 아니고 면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 다 해 주는 거 너희들한테 말로 먼저 말 보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알래스카 LNG 이거 같이 하자, 이거 던져 놔어요.

알래스카 LNG 어떤 건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 수익성 리스크 있는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익의 차원에서 충분히 이견 논의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해 갈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했다, 트럼프가 이거 갖고 그레이트 세일을 했다고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김종민 의원** 그러면 정상끼리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장관들끼리 얘기하면서 안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 갖고 보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모든 것은, 협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협상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트럼프가 한국하고 이거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이게 합의된 겁니까, 양자 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합의가 됐다기보다는 정상 간에 관심 분야가 어디인지를 서로 알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런 통화가 없었다……

○**김종민 의원** 한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다 그러면 정상 간에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에서 무슨 생각 하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게 정보예요? 정상 간에 그 정도 정보 얻으려고 정상회담 합니까? 이미 이전부터 트럼프는 한국하고 알래스카 LNG 협상하겠다고 여러 번 공개를 했는데 그 정보가 필요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과거에 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 참…… 이것 참 답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딴 얘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대격변이잖아요, 지금 경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종민 의원 엄청난 격변기예요.

최근에, 우리 경제수장으로 계셨으니까 최근 국제경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대전환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워드 생각나는 것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최근에…… 원래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DX, AI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지금 글로벌 교역질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도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 교역질서에 있어서 중상주의의 귀환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러패권이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우리 경제수장께서 인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요, 트럼프가 들어서서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처음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됐고 바이든 때 일부 연장이 됐습니다, 이미.

지금 보호주의, 국가대항전 이게 신자유주의나 자유시장주의 이런 시대하고 달라진 것, 그것 못 느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의원님, 보호주의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질서나 룰 베이스에 따른 그런 교역질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주의하고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관세폭탄은 다른 문제고요. 더 심한 경우고, 그전부터 이미 미국은 미국 대로 한국을 같이 협력하고 하는 대상보다는 견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중국도 한국과 협력 대상이기보다는 추월 대상, 추격 대상…… 이미 추월해 버렸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중국을 등에 업고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아까 그림에 보니까 자유방임주의나 자유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역정책이나 대외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 정부 들어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밸류업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종민 의원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왜 했고 성과가 어떻게 한번 평가 좀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 자체가 우리 기업들을 제대로 반영, 기업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수요·공급 기반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시작

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걸렸던 작업이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종민 의원** 밸류업이 아니고 그냥 프라이스업입니다.

지금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밸류업 하려면 기술투자, 혁신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돼요. 일본도 밸류업의 핵심이 혁신금융입니다. 우리는 자사주 배당하고 기본적으로 주가 올리는 프라이스업이에요,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밸류업 안 됩니다.

이것 갖고 논쟁해 봐야 기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기업가치의 역동성이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요.

○**김종민 의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모태펀드 축소했잖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모태펀드 축소해서 완전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동맥경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R&D 예산 축소해 가지고 우리 연구 일자리 다 망가트리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게 무슨 밸류업입니까. 이것은 그냥 가격 올리는 거예요, 가격. 시장가격 올리는 것.

AI 얘기 좀 합시다, AI.

AI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대전환기에 국가 전략 중의 하나가 이 AI 같은 것에 국가가 국가 대항전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약간 민간에 맡겨 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AI 투자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AI 투자 규모라는 것이, 정부의 투자 규모는 저희가 원래 세웠던 것보다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 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제가 작년에 산자부 국감 할 때 올해 예산에 10조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이터센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해 2000억 올려서 2조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종민 의원** PPT 혹시 없나요, AI 투자한 것?

중국이 한 800조, 미국이 한 700조. 여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대국이니까. 일본이 100조. 그런데 EU가 아주 후발인데 32조예요. 우리가 지금 4조입니다, 4조. AI 투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G3는커녕 개발도상국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트렌딩이 국가 대항전이라는 기본적인 본질에서 좀 어긋나 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칸 게 우리나라 예산의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기 나옵니다.

○김종민 의원 23%.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종민 의원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 그때 예산이 대충, 어바웃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김대중 정부 때요?

○김종민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김종민 의원 60년대, 90년대, 지금 대한민국이 세 번째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였다면 또 DJ 때 정보고속도로였다면 지금은 AI고속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이 AI고속도로 깔려면 박정희 때 수준으로 하면 100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DJ 때 10조를 투자했다면 지금 100조 정도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논의가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저희가 AI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AI인프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 투자가 작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순수 예산이 2조였고 민간 부문의 투자는 60조, 다 하니까 62조였는데 정부 투자가 작다고 하는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R&D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종민 의원 지금 이 정도 투자 규모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들어가세요.

이 경제적 대격변을 돌파하려면 정치나 정부는 뭘 해야 되나?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 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정부가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장철민)

(17시49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앞에 나와서 보니까 좀 많이 안 계시긴 하네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나와 주시지요.

일단 본격적인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사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제일 쉬운 일이다. 그냥 할 일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쉬운 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단 한 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조차 사과 비슷한 것도 하지 않고요. 정부를 지금 대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을 제가 거의, 아예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국무위원 중의 어떤 분이 국민들께, 우리 공동체에, 우리 역사에 성찰하고 사과했다는 얘기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 있는 주체인 국민의힘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대선 출마 눈치 게임하고 밸런스 게임하고 약간 이런 거의 예능 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현재의 표현에 의하면 대한국민들께서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에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제일 쉽다고 말씀하신 그 사과를요. 그 정도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부당한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철민 의원** 그러면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런 방법으로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장철민 의원** 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제가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더욱더 제 몸을 불살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민생 안정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철민 의원** 그러니까 그냥 사과…… 아니, 저 같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특히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하셨었으니까 이 역사의 비극 앞에, 이 민주주의의, 이 공동체의 비극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국민들께, 그리고 사실 공직사회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사과한다, 그 사과와 성찰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총리님 얘기하신 거랑 그렇게 다른가요, 그게? 왜 사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지요? 도대체 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장철민 의원** 아니, 그러면 사과하시면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철민 의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장철민 의원** 아니, 정말로 지금 윤석열 파면이라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이라는 이 상황이 대한국민인 우리 국민들께서 사과 한마디 못 받으실 그런 상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 제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고 제 소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게 사과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철민 의원**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동은 보여…… 행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의원** 말로도 사과하고 행동으로도 사과하고, 그 성찰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져 온 나라를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아무도 사과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그 누가 책임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백 번도 천 번도 만 번도 성찰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이 비극 앞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들의 고통, 이 역사의 파괴, 우리의 공동체가 안은 이 상처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정치가 그 성찰, 그 반성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 참 우리 국민들 사과받기 어렵네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 어쨌든 며칠 안 남은 굉장히 과도적인 정부이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분들의 그 말씀 한 번 듣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그런 이야기는 참 듣기 어려운데 우리가 대선 출마 선언은 참 많이 듣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철민 의원** 아니,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셨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는 순간 또다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시는 거잖아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저한테 주어진 일을 전 할 뿐입니다.

○**장철민 의원** 그냥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그냥 다시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게 적절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철민 의원**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출마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 당연히 안 하지요.

○**장철민 의원** 그러면 뒤에 계신 국무위원들 중에 누구 출마하십니까?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안 하시지요?

대선 출마한다는 것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도 ‘당연히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안 한다, 지금 부총리님 애

기하시는 것처럼 ‘사과는 쉬운데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 왜 못 합니까? 생각 있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선 출마의 그 빌드업을 하고 싶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총리님은 쉽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신 김문수 전 장관님 말고는 이미 뜻 있는 분들은 나가셨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해도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윤석열, 윤석열의 아바타와 다음 대선을 치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무위원들께서 ‘한덕수 총리 한번 나가 보시라’라고 해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한민국에 비극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께 너무 죄짓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꼴이 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아직도 다 권력자들이 권력놀음이나 하고 있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무책임한 태도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요. 국민에 대한,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윤석열 혼자 한 겁니까? 한덕수 총리나 부총리님이나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신임에 배반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철민 의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께서 국민의 신임에 배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말도 안 되는 현재 재판관들 임명하는 행태나 오늘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국민의 힘과 관련된 인사들을—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명 가까이인데요—알박기하고 있는 행태나 이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장철민 의원** 뭐 답변은 그냥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 인사, 공공기관 인사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지 않고 그 부분들이 알박기라는 정의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장관들이 제청을 하거나 해서 권한대행이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 모든 걸 그렇게 하나 그룹핑을 해 가지고 ‘모든 게 알박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대행 시절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각 부처별로」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가 저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의 임원이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연속성을 위해서, 그 서비스가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장철민 의원** 국민의 신임이라는 건 뭘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국민의 신임? 진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국민의 신임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도 하시고 지금도 부총리시고 하니까 국민의 신임이 뭘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는, 국민의 신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의원님께서—물론 저도 국무위원인데—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무책임하고 당신은 국민의 신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은…… 의원님은 아시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장철민 의원** 그냥 부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 남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신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국민의 신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켜 나가야 하는가. 저도 나름 제 생각이 있지만 부총리님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대행내각에서의 국무위원이 가지는 국민의 신임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 드리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 제가 생각하기엔—이건 제 생각입니다—국민들께서는 보통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어도,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도 누군가들이 할 일을 해서, 누군가들은 우리 국가시스템 안에서, 특히 아마 여기에 있는 관료들에 대한 믿음이실 텐데 그래도 똑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도 우리가 나아간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저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의원**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걸 배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7주 남은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돌아간다,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잔존세력이 가진 탐욕만 보시고 있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거나 누가 그렇게 보신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철민 의원** 탐욕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철민 의원** 이 상황에 헌재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민의 신임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국민의 신임을……

○**장철민 의원** 헌법재판소 자체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 그런 생각을 갖

고……

○**장철민 의원** 망가뜨리려는 그 시도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폼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장철민 의원** 그러면 그 말씀이 맞으려면 무한히 절제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돼요. 권력 행사가 절대로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직도 건강하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셔야 그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의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마구잡이 알박기를 하는 게 그 권력의 자제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한두 가지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장철민 의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얘기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전체가. 지금 하루하루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네요. 12분 너무 짧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부총리님과 그냥 공직사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49일이, 오늘도 통상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나눴습니다. 49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이 소중한 시간이 아마 공직사회와 많은 분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어렵고 불확실성은 크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직사회 전체가 지금 솔직히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마지막 남은 자의적 권력 행사와 탐욕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희가 이런 불신과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믿음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권력과 권한, 지금 마지막 남은 이 한 톨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고 꼭 필요한 일들을 국회와 상의해서, 그래도 지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상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면요,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직사회에서 여기 있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각 부

처에 있는 간부들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 지금 하루도, 아까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은 그 뒤를, 그 많은 공직자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의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장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원택)

(18시07분)

○의장 우원식 마지막으로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문자와 답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경청하도록 합시다.

○이원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북 김제·부안·군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지만 오로지 김건희 수사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 결과 인명은 경시되었고 국민의 생명은 죽음에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법꾸라지 기술을 부려서 교묘히 범망을 빠져나가고 늘상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재해 상황을 점검해 보고 이번 경북·경남에서 일어난 산불 재난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원택 의원 PPT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대형참사 현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제주항공 참사, 산업재해, 채 해병 사건, 예천 집중호우 피해 사건, 의료대란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입니다.

오차야 있겠지만 7776명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정부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먼저 지금 말씀하신 많은 사고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답변 시작합니다.

저도 대행 시절에, 제주항공 사건이 제가 이틀 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가

가지고 많은 현장을 목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응 체계를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이런 필요한 재정지원을 지금 저희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외의 자료도 있겠지만 7776명의 국민의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때 과연 정부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졌으면 저는 거기에서 다른 참사에 대한 대비의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시다시피 사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서 다 빠져나가고 무죄가 나오고 있고 하위직만 처벌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없고 대책이 없었던 거지요.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저는 어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그 기조가 약하지 않았나, 경시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송 참사 사건도 거기의 사업단장은 6년 선고를 받았지만 김영환 도지사라든가 관계 기관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향후 대비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구축했는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저는 계속 그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 사건은 그래도 권한대행 시절에 잘 대응을 해서, 여야가 각자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에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산업재해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걸 정부가 2년 유예를 요구하고 또 국민의 힘에서도 요구했는데 노동자들을 카르텔 취급하고, 이권 카르텔 취급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이 죽음에 몰리고 있다는 거지요.

채 해병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박정훈 대령을 역으로 항명죄로 엮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통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고 건수,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원택 의원 아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통계청 자료로 하는 거니까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래서……

○이원택 의원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재난과 재해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게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일어났을 때 대하는 태도, 반성과 성찰과 사과와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을 회피하는 태도로부터 국민들이 위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과의 문제가 저는 거기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원택 의원** 예천의 집중호우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의 강릉 산불 피해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대란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갔다는 것이 3136명으로 추계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총리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인명, 생명과 재산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이런 기조가 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은 그런……

○**이원택 의원** 제대로 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사회재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후변화를 통한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의원님 말씀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원택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위공직자들이 회피하고 면피하면서는 절대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이번 산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PT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25년 올해 2월 12일 날 봄철 대형 산불 대비 대응계획을 주재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원택 의원** 그때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이게 의성 산불 한 달 전입니다.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산불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감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발생했을 경우에 헬기를 포함한 장비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했었습니다.

○**이원택 의원** 제가 볼 때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대형 산불이 이제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그때 우리 권한대행 주재하에 사실 봄철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였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의원** 저는 거기에 한번 부총리께, 경북 지역에 사실 대형 헬기가 몇 대 배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경북…… 지역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원택 의원 안동과 울진이, 우리나라 산불의 55%가 경북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그리고 안동과 울진에 전체 대형 헬기 7대 중 2대가 배치돼 있는데 그 중 1대가 고장 나 있어요. 그것 모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모르지만 대형 헬기를 전략자산처럼 같이 나누어서 유동해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그러니까 모르셨잖아요.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카모프 헬기 등 러시아, 전체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가 운영이 안 되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원택 의원 그다음에 미국의 대형 헬기 2대도 수리 상태로 불가능했다는 것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원택 의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야간 헬기, 총 50대 중 야간 헬기는 3대만 운용이 가능한데 실제 이 3대도 야간에 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 점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당시에 헬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원택 의원 점검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원택 의원 임차 헬기 예산 안 들어간 것 아시지요, 산림청 25년 예산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임차 헬기……

○이원택 의원 또 하나, 23년에 감사원에서 헬기 출동과 관련해서 골든타임제를 도입하라 이런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그 원점에 물로 폭탄을 내려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골든타임제에 대한 검토 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2월 달 주재 회의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임차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원택 의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월 권한대행 주재 회의 때 과연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 골든타임 이런 것에 대한 점검과 대책 이런 것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재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또 하나, PPT 돌려 주시겠습니까? 총리 중심의 중대본입니다. 저는 세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PPT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21일부터 24일까지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의원 22일 날 현장에 가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의원 그런데 23일 날 산불이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산림청장이 가용자원을 동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총리가 직접 주재해서 중대본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의원 저는 그때 그 가용자원을 이끌어 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24일에도 없었고 25일 날 이것이 영덕까지 확장되는 과정에도 없었고 26일에도 없었습니다.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27일 날 그걸 검토할까 생각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중대본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저는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제가 그때 대행하기 직전까지는 산불이, 의성 산불이 그때는 이렇게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과거에 없었던 가장 빠른 바람과 바람 속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과 중수본 체제에서의 어떤 그게 원활하게 거버넌스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원택 의원 제가 이 경북 산불과 관련해서 과거의 참사 속에서 교훈과 대비, 대책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2월 달 점검회의 때 제대로 된 점검을 했어야 되고 진화 과정에서 대응이 정확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다른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피와 구호 과정도, 이게 강릉 산불입니다. 산불이 나면, 강풍이 불면 이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23일입니다.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원택 의원 의성 산불이 저렇게 부채꼴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덕이라든가 저쪽 영양이라든가 충분히 안내와 대피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이 대피와 발동이 늦어져서 영덕에서는 열 명이 죽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도 중수본의, 중대본의 역할 또 대피 과정에서도 역할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인재라는 말씀을, 인재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걸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는…… 지금 제가 총리는 아니지만 추경에 이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짚어 보고 필요한 게 있는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이제 복구에 관한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경상남도는 1조 7000억 정도

된다는데 사실 미리 대비했으면 한 이삼천억이면 끝날 걸 1조 7000억까지 들게 생겼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이게 재난·재해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입장 이거에 대한 성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애꿎게 주민들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복구, 재해·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재난안전법은 생계 구호와 복구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이원택 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해 왔던 게 농업재해대책법, 기투입된 생산비까지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권했던 것을 한덕수 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법안에 이런 수준으로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복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생계 구호나 복구 수준에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디딤돌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 하나가 5000만 원인데 500만 원 지원하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농업기계만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책법을 좀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경북·경남 산불에 대해서 기재부가 진향적인 태도를 구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대비와 복구 과정이 사실 흐지부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오늘, 일단 아까 말씀하신 특히 사전에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이나 중대본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써야 되는 부분들도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실 지금 상호 관세 속에서 농업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산자부장관에게 질문도 하고 대응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대미 농산물은 저희가 80억 달러가 무역 적자입니다.

지난번 FTA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계가 희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생자금을 매년 1000억씩 1조 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의 협상 과정에서 농업계를 다시 희생의 불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쌀 의무수입량의 기준점이 변경돼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알박기 인사와 관련된 근거나 내용도 준비했었는데 농식품부장관님 또 부총리께서도 이제 헌법에 또 법률에 대통령이 파면된 조건에서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경남에 계신 산불 피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위로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우원식 이원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8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칠승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북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희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희

○출석 의원(28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개회 시 재석 의원(214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립	문정복	민형배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성일중	소병훈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소영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해민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훈	조지연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산회 시 재석 의원(26인)

권향엽	김승수	김영진	김영호	김종양	김 현	노종면	문금주	문대립	박 정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백선희	백혜련	서영교	안태준	우원식	위성곤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임미애	장철민	조계원	최은석				

○출장 의원(4인)

이병진 임광현 장경태 채현일

○청가 의원(5인)

김은혜 박상웅 손명수 이재명 이학영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출석 정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성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장경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2025. 4. 14.
기획재정	김영환	장경태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9)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5)

이상 3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2025. 4. 15.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823)

○청원 제출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4. 14. 정예찬 외 50,60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5. 4. 7. 법무부(비공개)

2025. 4.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 2건 4월 9일 국방위원회에 송부

2025. 4. 11. 국방부(비공개)

2025. 4.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비공개)

이상 2건 4월 11일 국방위원회에 송부

(부록으로 보존함)

임시회의록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2025. 1. 7. 기준

국회 소속 기관 부석

의사국장

사무총장

의사1대장

국무위원보좌석

의장

